

[한국금융학회 특별 정책 심
포지엄] 통화정책의 평가와
전망

2022.6. 10

문우식
서울대학교

목차

- 1 통화정책의 목적과 운영상황
- 2 코로나 정책대응과 한국은행의 신용정책
- 3 한국은행의 조직
- 4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역할
- 5 향후 한국은행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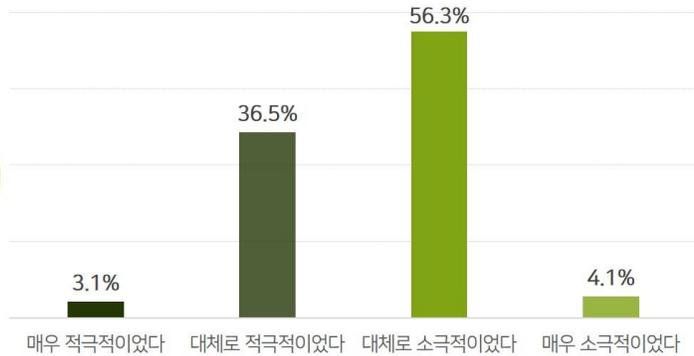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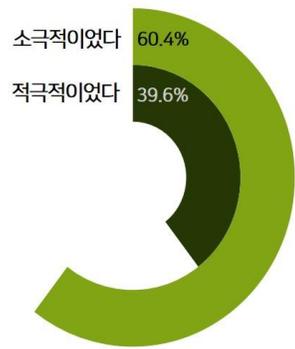
1 통화정책의 목적과 운영상황

- 어느 나라의 중앙은행이든지 물가안정은 통화정책의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임.
- 우리나라도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이뤄진 6차 한은법 개정을 통해 한국은행의 설립목적 을 물가안정으로 한정하는 단일목표제를 운영하여 왔으며 또한 인플레이션 목표제(Inflation targeting)를 도입하여 물가목표의 설정과 달성의무를 공표.
- 그러나 지난 20여년간 한국은행이 물가목표에만 집착하여 성장목표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2012년 이후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면서 한국은행이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많은 지적이 있었음.
- 이러한 배경 하에서 우리나라 경제전문가들에게 2000년 이후 한국은행의 경기회복에 대한 입장, 정책목표에 고용안정조항의 삽입, 코로나 대응 등에 관해 물어보았음.

2000년 이후 한국은행의 경기회복에 대한 입장

문 1.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의 목표로 물가안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에 전념하므로 경기회복을 위한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2000년 이후 한국은행의 경기회복에 대한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한국은행은 경기회복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 ② 한국은행은 경기회복에 대체로 적극적이었다
- ③ 한국은행은 경기회복에 대체로 소극적이었다
- ④ 한국은행은 경기회복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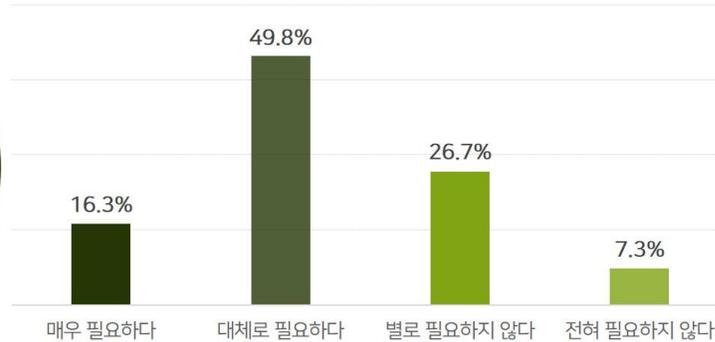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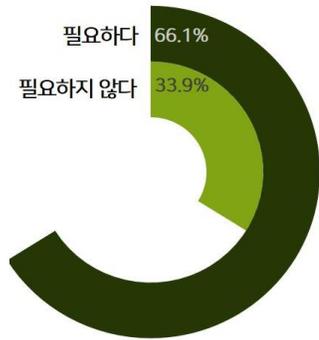
경제전문가들은 60%이상이 대체로 한국은행이 물가안정에 전념하면서 경기회복에 소극적인 입장('매우 소극적이었다' 4.1% + '대체로 소극적이었다' 56.3%)을 취해 왔다고 답하였고 약 40%만이 경기회복에 적극적('매우 적극적이었다' 3.1% + '대체로 적극적이었다' 36.5%)이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응답자를 특성별로 살펴보았을 때 특히 연구원들이 한국은행이 경기회복에 소극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답한데 비해 경기회복에 민감히 반응할 수 있는 기업인들은 다른 응답자에 비해 한국은행의 대응이 특별히 소극적이라고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목표에 고용안정 삽입의 필요성

문 2.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목표에 고용안정을 삽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 ② 대체로 필요하다
- ③ 별로 필요하지 않다
-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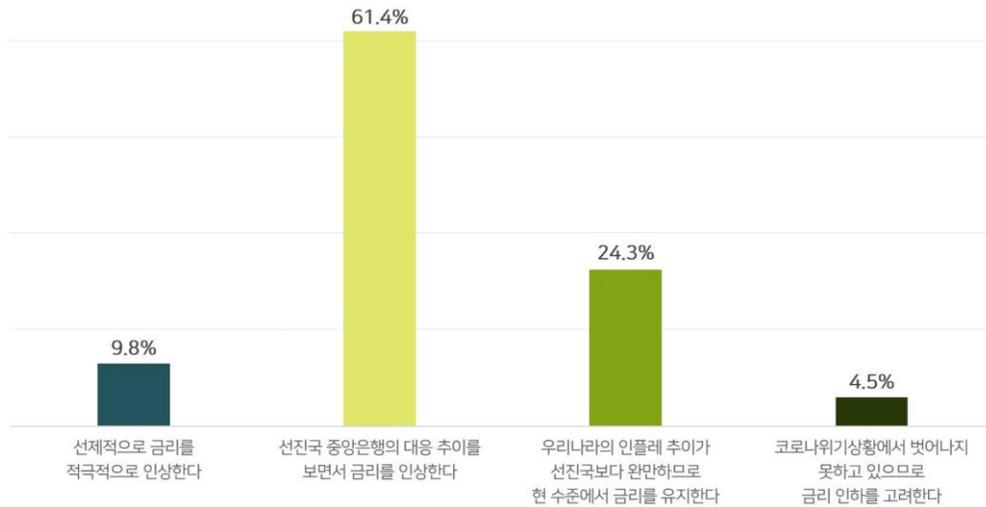
- 경제전문가의 66.1%(‘매우 필요하다’ 16.3% + ‘대체로 필요하다’ 49.8%)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목표에 고용안정을 삽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비해 통화정책 목표에 고용안정을 삽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3.9%(‘전혀 필요하지 않다’ 7.3% + ‘별로 필요하지 않다’ 26.7%)에 불과.

- 한편 응답자별 특성을 살펴보면 기업인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목표에 고용안정을 삽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경기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현장 중심의 기업인이 한국은행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경기에 대한 대응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라 추산됨.
- 그러나 한국은행법에 규정된 단일목표제는 물가안정을 우선하여 책임을 지라는 의미이지 다른 목표를 무시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며 정책목표는 법적으로 규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많음.
- 실제 경제성장이나 고용안정의 목표가 무시된 적은 통화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금융통화위원회가 이전의 금융통화운영위원회라는 명칭을 개정하여 출범한 이래 한 번도 없었음. 예컨대 1998년 한은법 개정이후 공개되기 시작한 의사록을 살펴보면 경기대응 목표가 무시되거나 소홀히 취급된 적은 없으며 오히려 많은 경우 경기대응 목표가 물가목표보다 우선하여 고려되었다고 판단됨.
- 따라서 한국은행의 경우 많은 경제전문가가 고용안정의 삽입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단일목표제하의 통화정책이 고용안정이나 경기에 대한 대응을 등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경제전문가에 대한 적극적인 소통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임.

인플레이션 우려와 코로나 위기 국면에 대한 한국은행의 대응 방안

문 3. 최근 주요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한국은행의 바람직한 대응방안은 무엇이라 생각되십니까?

- ① 선제적으로 금리를 적극적으로 인상한다
- ② 선진국 중앙은행의 대응 추이를 보면서 금리를 인상한다
- ③ 우리나라의 인플레이 추이가 선진국보다 완만하므로 현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한다
- ④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금리 인하를 고려한다



-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대폭인상하기 전에 이뤄진 2월에 이뤄진 조사결과이지만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는 한국은행에 신중한 통화정책 운영을 주문함.
- 예컨대 경제전문가의 과반(61.4%)은 한국은행의 바람직한 대응방안으로 '선진국 중앙은행의 대응 추이를 보면서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며 경제전문가 4명중 한 명(24.3%)은 '우리나라의 인플레이 추이가 선진국보다 완만하므로 현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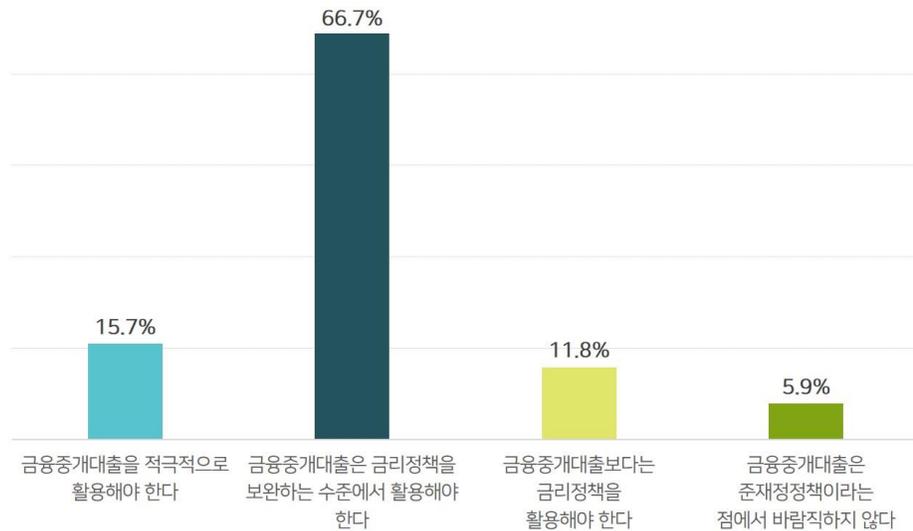
2) 코로나 정책대응과 한국은행의 신용정책

- 한국은행은 2013년 기존의 총액한도대출제도를 변경하여 금융중개대출제도를 도입. 코로나 위기이후 한국은행은 금융중개대출을 대폭적으로 확대하여 코로나위기에 대응하여 코로나19로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
- 그러나 한국은행의 금융중개대출은 기존의 총액한도대출제도가 유동성공급을 제한하는데 초점을 두고 운영되다보니 경기애 탄력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이에 따라 금리정책의 보조정책수단으로만 사용되어 왔음.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영국의 대출펀딩제도(funding for lending)을 벤치마크하면서 경기대응 목적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등장하였음. 특히 금리정책이 경제전반에 무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반해 금융중개대출은 분야별로 차등하여 경제에 영향을 줌.
- 따라서 금리를 낮추면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이라 할 수 있는 가계대출을 확대할 우려가 있는 반면 금융중개대출을 사용하면 같은 효과를 보면서 코로나 위기로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그 정책효과를 제한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내에서도 금융중개대출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고 또 경제전문가들에게도 그 효용성이 충분히 홍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이에 따라 금융중개대출의 활용도 및 그 확대가능성에 관해 물어봄.

한국은행의 금융중개대출 활용

문 4. 코로나 위기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은 코로나 피해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2021년 금융중개대출한도를 25조 원에서 43조 원으로 확대하고 대출금리를 0.25%로 인하하였습니다. 위기대응책으로 한국은행의 금융중개대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금융중개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 ② 금융중개대출은 금리정책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활용해야 한다
- ③ 금융중개대출보다는 금리정책을 활용해야 한다
- ④ 금융중개대출은 준재정정책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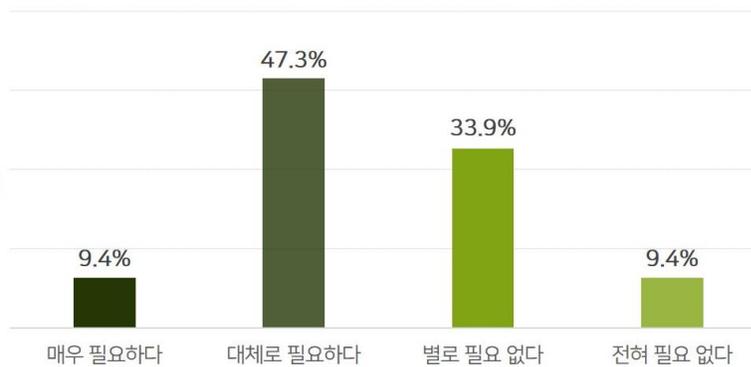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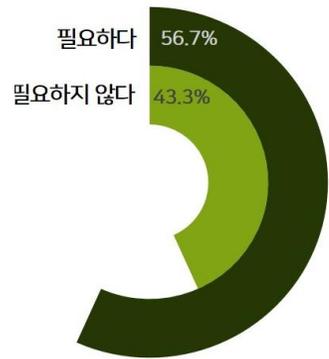


- 다수의 경제전문가(66.7%)가 코로나 위기 대응으로 한국은행이 실시한 금융중개대출한도 확대와 금리인하에 대해 '금융중개대출은 금리정책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금융중개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15.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특성별로 보았을 때 기업인과 금융인은 한국은행이 시행하고 있는 금융중개대출의 지원대상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교수나 연구원 등 학계에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부정적 의견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금융중개대출의 지원대상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

문 5. 현재 한국은행이 시행 중인 금융중개대출은 한은법상 금융기관으로 정의된 은행에 대해서만 대출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 등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중개대출의 지원대상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 ② 대체로 필요하다
- ③ 별로 필요하지 않다
-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 경제전문가의 과반인 56.7%('매우 필요하다' 9.4% + '대체로 필요하다' 47.3%)가 한국은행이 시행하고 있는 금융중개대출의 지원대상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제2금융권으로 확대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43.3%('전혀 필요 없다' 9.4% + '별로 필요 없다' 33.9%)나 되어 향후 금융중개대출의 유용성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
- 특히 특성별로 보았을 때 기업인과 금융인은 한국은행이 시행하고 있는 금융중개대출의 지원대상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교수나 연구원 등 학계에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부정적 의견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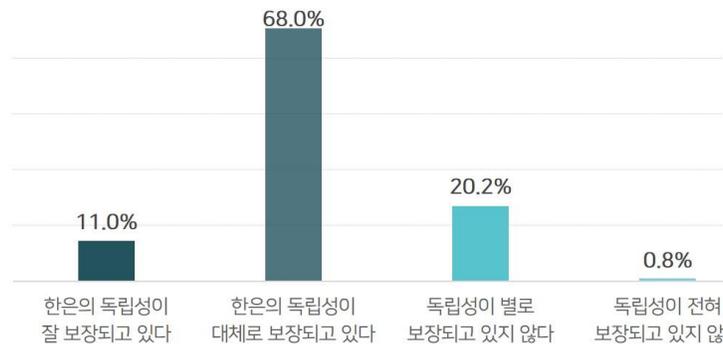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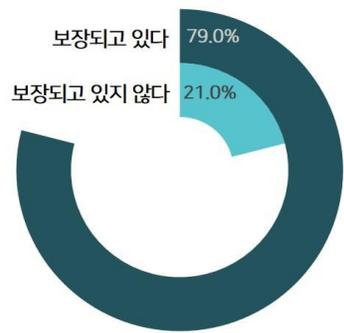
3 한국은행의 조직

- 1998년 한은법개정을 통해 물가안정이 한국은행의 단일목표로 명시되고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장이 재경부장관에서 한국은행 총재로 변경되는 등 정부의 통화정책에 대한 간섭이나 지시가 크게 줄어들게 되면서 한국은행의 독립성은 크게 높아졌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 경제전문가들에게 한국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평가를 물어봄.
- 그러나 한국은행의 독립성문제는 의사결정기관인 금융통화위원회의 독립성문제임.
- 금융통화위원회는 미 연준이사회와 같은 독립적 행정위원회(autonomous administrative agency)로 정부에 독립하여 민간의 활동을 규율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경제정책 분권화 시도**라 할 수 있음.
- 전통적인 대륙법체계하에서 민간의 활동을 규율할 수 있는 것은 정부이외의 기관일 수 없다는 관점에서 독립적 행정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많은 오해가 존재하여 왔고 한국은행의 독립성 문제를 한국은행과 재경부 두 기관간의 독립성문제로 간주하여 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자체를 축소시키고 종종 한국은행의 내부 경영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무력화하여 금융통화위원회는 일반 은행의 사외이사보다 권한이 없는 상태임. 이러한 맥락하에서 금통위가 한국은행의 내부경영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에 물어봄.

한국은행의 독립성

문 6. 1998년 한은법 개정을 계기로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장이 한은 총재로 바뀌는 등 통화정책이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①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잘 보장되고 있다
- ②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대체로 보장되고 있다
- ③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별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
- ④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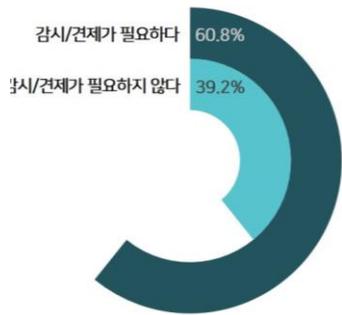


- 경제전문가의 대다수(79.0%: '잘 보장되고 있다' 11.0% + '대체로 보장되고 있다' 68.0%)가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은 21.0%('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다' 0.8% + '별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 20.2%)에 그치고 있음.

금융통화위원회의 한국은행 내부 경영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

문 7. 현재 금융통화위원회는 독립적 행정기관으로 한국은행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주로 금리 결정을 위한 정책위원회로서의 역할에 그치고 한국은행의 내부 경영에 대해서는 역할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한국은행의 내부 경영에 대해 감시와 견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 ② 대체로 필요하다
- ③ 별로 필요하지 않다
-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 경제전문가(60.8%: '매우 필요하다' 13.3% + '대체로 필요하다' 47.5%)는 금융통화위원회가 한국은행의 내부 경영에 대해 감시와 견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금융통화위원회가 한국은행의 내부 경영에 대한 감시와 견제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39.2%('전혀 필요하지 않다' 6.3% + '별로 필요하지 않다' 32.9%)에 불과.
- 그러나 특성별로 보았을 때 특히 금융인의 과반수가 금융통화위원회가 한국은행의 내부 경영을 감시·견제하는 것에 대해 불필요하다고 답함.
- 이는 무엇보다도 관치금융을 통해 은행들을 통제하는 금융위원회와 같이 금융통화위원회도 부당하게 한국은행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금융인들이 금융통화위원회의 내부경영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크게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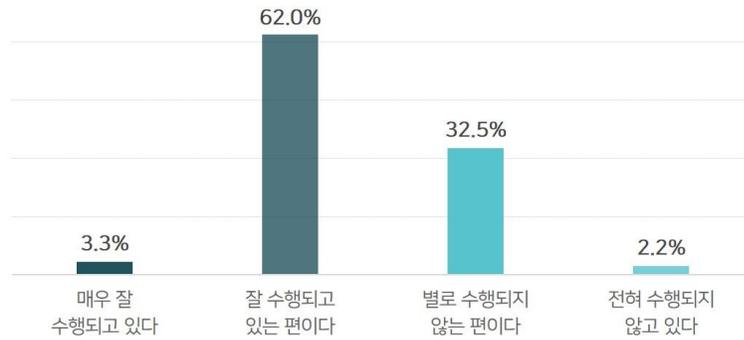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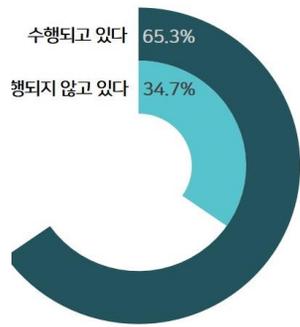
4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역할

-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행은 금융안정과 불가분 관계에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통화정책의 파급효과가 금융시장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임. 한편 금융위기기 초래하는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감안할 때 중앙은행은 금융불균형 또는 자산버블을 방지하기 위해 위기방지정책을 사전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2011년 12월 한은법 8차 개정을 통해 제1조 목적조항에 통화신용정책 수행시 금융안정에 유의하도록 하고 연 2회 이상 거시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책무를 부과받음. 이에 따라 금융안정을 위한 한국은행의 역할에 대해 물어봄.
- 그러나 금융안정이 한은의 목적조항으로 부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은은 금융안정을 위한 직접적인 정책수단이 없는 상황임. 이는 무엇보다도 LTV나 DTI 등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을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임.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새로운 정책수단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에 물어보고 비금융기관에 대한 한은의 감시역할 확대에 대해서도 물어봄
- 한편 Basel III국제규범의 시행과 관련하여 경기확대기에 금융기관 자산의 0~2.5% 범위에서 완충자본 적립을 요구하는 경기대응완충자본(Counter-cyclical buffer)의 도입운영과 관련하여 경제전문간들에게 가장 바람직한 형태를 물어봄.

금융안정을 위한 한국은행의 역할 평가

문 8. 2011년 한은법 개정을 통해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역할이 정책 목표로 도입되었습니다. 현재 금융안정을 위해 한국은행의 역할이 얼마나 잘 수행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잘 수행되고 있다
- ② 잘 수행되고 있는 편이다
- ③ 별로 수행되지 않는 편이다
- ④ 전혀 수행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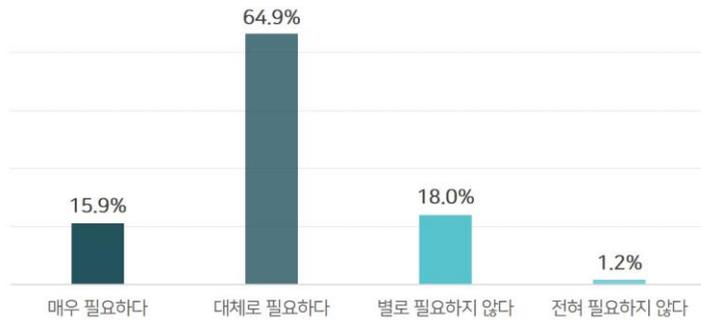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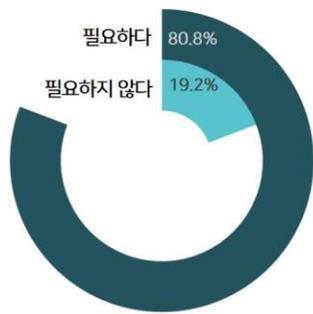


- 금융안정을 위한 한국은행의 역할과 관련하여 경제전문가의 65.3%('매우 잘 수행되고 있다' 3.3% + '잘 수행되고 있는 편이다' 62.0%)는 잘 수행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한국은행이 금융안정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는 34.7%('전혀 수행되지 않고 있다' 2.2% + '별로 수행되지 않는 편이다' 32.5%)에 불과하여 지난 10여년에 있어 금융안정을 위한 한국은행의 노력이 성공적으로 평가.

한국은행의 새로운 정책수단 개발 역할 확대

문 9.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역할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그 수단을 독점하고 있어 한국은행의 거시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수단이 제한되어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새로운 정책수단을 개발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 ② 대체로 필요하다
- ③ 별로 필요하지 않다
-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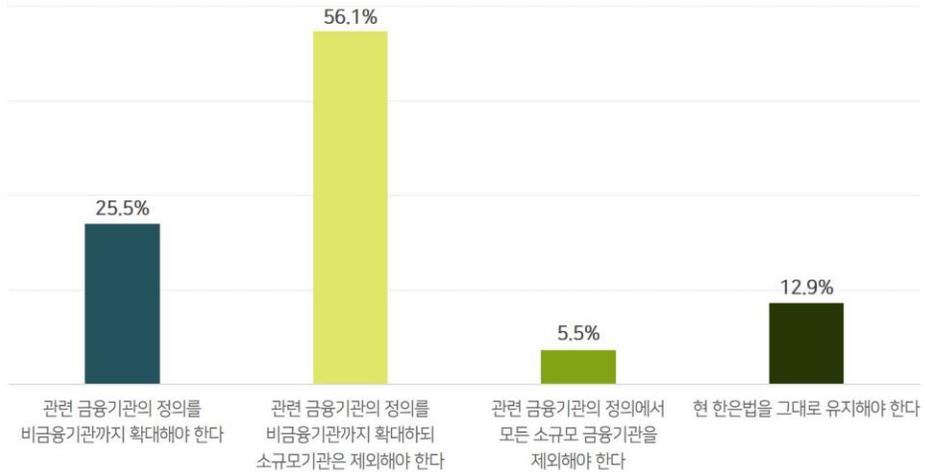


- 경제전문가(80.8%: '매우 필요하다' 15.9% + '대체로 필요하다' 64.9%)는 압도적으로 한국은행이 거시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수단을 개발할 수 있는 역할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
- 한국은행이 새로운 정책수단을 개발하도록 하는 역량 확대에 반대하는 의견은 19.2%('전혀 필요하지 않다' 1.2% + '별로 필요하지 않다' 18.0%)에 그침.

비금융기관에 대한 한은법 개정

문 10. 금융안정을 위한 한국은행의 역할과 관련하여 현재 증권회사나 보험회사와 같은 비금융기관은 한국은행이 자금지원이나 감독을 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처해 있고, (한은법상 금융기관은 은행만을 지칭함) 특히 Basel III규약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SIFI)이라도 비금융기관은 한국은행이 적절히 감독을 할 수 없어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한은법 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한은법상 관련 금융기관의 정의를 비금융기관까지 확대해야 한다
- ② 한은법상 관련 금융기관의 정의를 비금융기관까지 확대하되 소규모 기관은 제외해야 한다
- ③ 한은법상 관련 금융기관의 정의에서 모든 소규모 금융기관을 제외해야 한다
- ④ 현 한은법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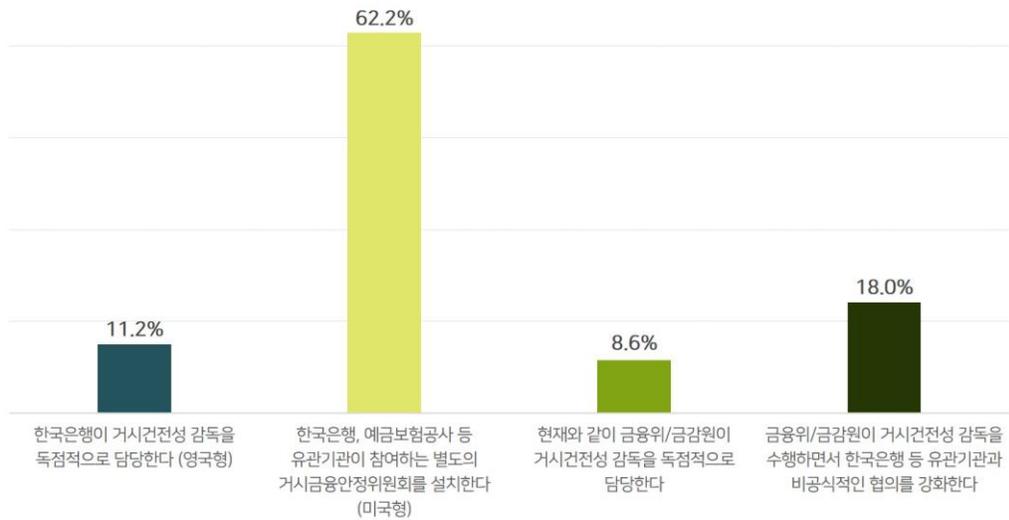


- 압도적으로 많은 경제전문가(81.6%)가 한은법상 관련 금융기관의 정의를 비금융기관까지 확대하여야 한다고 지적.
- 다만 이들 경제전문가들의 56.1%는 '한은법상 관련 금융기관의 정의를 비금융기관까지 확대하되 소규모기관은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하여 한은의 금융감독체계의 정비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남.

경기대응완충자본 설정을 위한 협력구조

문 11. Basel III 국제규범의 시행과 관련하여 경기확대기에 금융기관 자산의 0~2.5% 범위에서 완충자본 적립을 요구하는 경기대응완충자본(Countercyclical buffer)의 설정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충자본의 설정은 한국은행의 경기안정기능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 한국은행과 감독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바람직한 협력구조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한국은행이 거시건전성 감독을 독점적으로 담당한다 (영국형)
- ②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별도의 거시금융안정 위원회를 설치한다(미국형)
- ③ 현재와 같이 금융위/금감원이 거시건전성 감독을 독점적으로 담당한다
- ④ 금융위/금감원이 거시건전성 감독을 수행하면서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 비공식적인 협의를 강화한다



- 경제전문가(62.2%)는 경기대응완충자본 설정을 위해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별도의 거시금융안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미국형)'고 응답. 미국의 경우 미 연준이사회의 의장이 재무부장관이나 다른 규제감독기관 기관장들과 함께 FSOC(Financial Services Oversight Committee)를 설립하여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을 수립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한편 '금융위/금감원이 거시건전성 감독을 수행하면서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 비공식적인 협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8%로 나타났고 한국은행이 영국에서와 같이 거시건전성 감독을 독점적으로 담당한다는 의견도 11%로 나타나 어느 경우나 경제전문가들은 지금보다는 훨씬 한국은행의 거시건전성 감독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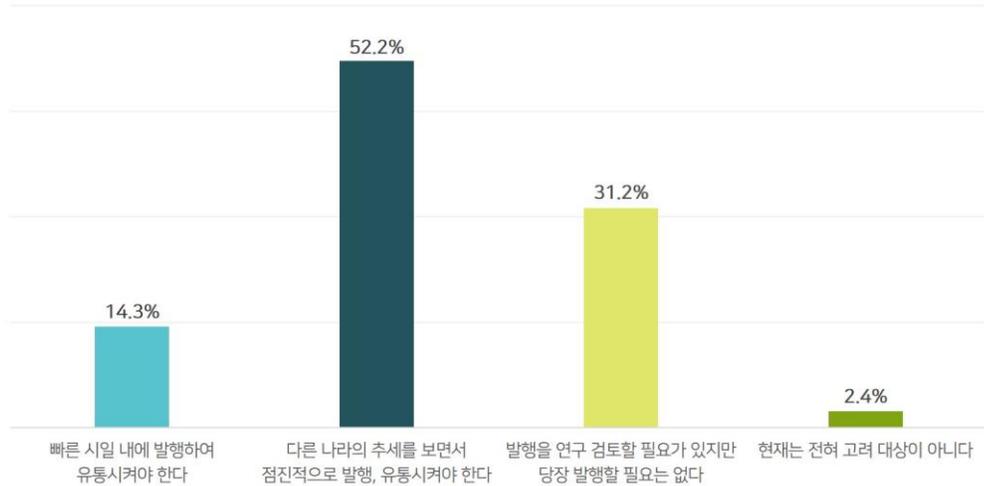
5 향후 한국은행의 역할

- 최근 현금이용이 감소하고 경제의 디지털화 및 글로벌 가상화폐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금융 및 경제 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있음. 이러한 배경 하에서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큰 관심을 갖고 디지털 통화(CBDC)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실제 중국의 인민은행 등 일부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이를 시범적으로 발행하여 유통시키는 실험을 하고 있음. 한편 3월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암호화폐의 장·단점을 평가하고, 중앙은행 디지털통화(CBDC) 연구개발을 검토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중앙은행의 디지털통화발행에 속도가 더 붙을 전망이다.
- 과거 중앙은행이란 돈을 찍는 기관으로 인식되고 실제 한국은행내에서도 **발권**이 중요업무임. 그러나 디지털환경하에서 **중앙은행이란 발권보다는 각종 금융망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고 이런 점에서 미래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지급결제국이 담당할 것으로 보임.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디지털통화발행의 필요성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에 물어봄.
- 한편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으로부터 우리경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원화도 일본 엔화와 같은 junior international currency로 이용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기본적으로 원화가 국제화되면 우리 국민은 달러나 유로, 엔 등과 같은 국제통화로 환전하지 않고 직접 원화를 해외에서 사용하여 많은 편의를 얻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도 디지털통화의 발행이 유용할 수 있음.

한국은행의 CBDC 발행

문 12. 금융의 디지털화와 관련하여 중국의 인민은행은 이미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를 발행하기 시작하였고,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도 이의 발행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CBDC 발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빠른 시일 내에 발행하여 유통시켜야 한다
- ② 다른 나라의 추세를 보면서 점진적으로 발행 유통시켜야 한다
- ③ 발행을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당장 발행할 필요는 없다
- ④ 현재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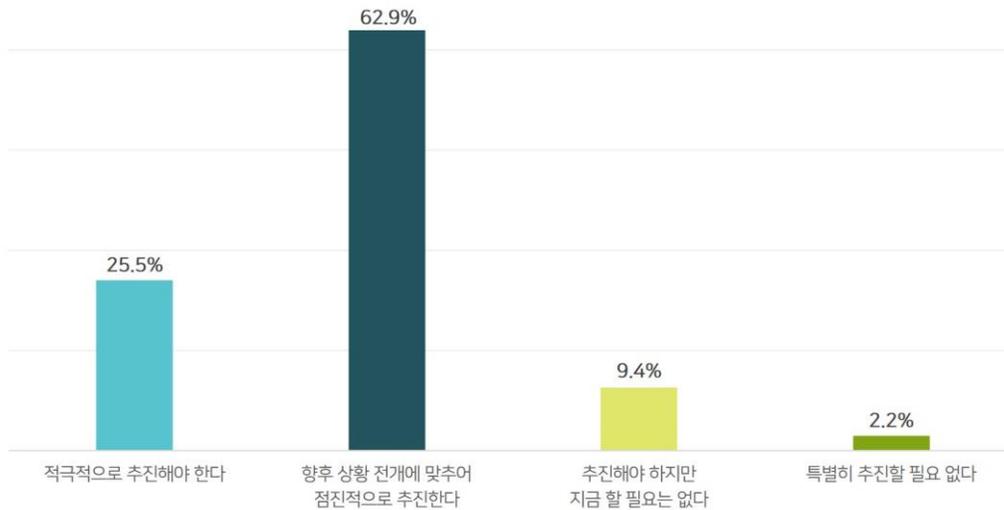


- 많은 경제전문가는 한국은행의 CBDC 발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66.5%).
- 다만 경제전문가의 52.2%가 한국은행의 CBDC 발행에 대해 '다른 나라의 추세를 보면서 점진적으로 발행, 유통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데 반해 '빠른 시일 내에 발행하여 유통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14.3%에 불과하여 적극적인 발행·유통보다는 점진적이고 보다 많은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됨.
- 반면 경제전문가의 31.2%는 '발행을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당장 발행할 필요는 없다'고 응답.

역외거래 규제완화를 통한 원화의 국제화 추진

문 13. 원화의 국제화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현재 원화의 역외거래에 대한 규제를 제외하고는 외환규제를 대부분 자유화하였습니다. 역외거래 규제를 풀고 원화의 국제화를 추진하는 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② 향후 상황 전개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 ③ 추진해야 하지만 지금 할 필요는 없다
- ④ 특별히 추진할 필요 없다



- 경제전문가는 대다수(86.4%) 원화의 국제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답함.
- 이 중 경제전문가의 62.9%는 역외 거래 규제를 풀고 원화의 국제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향후 상황 전개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하였으며 '원화의 국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2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